

정부의 대학재정 지원사업 현황 분석

강 경 석 | 인하대 교육학과 교수

1. 서 론

지난 몇 년 동안 정부와 각 대학은 대학교육의 수월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경주해 왔다. 대학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유능한 교수의 확보, 시설의 확충 및 현대화 등 교육여건과 교육과정의 개선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그러나 교수 수의 부족으로 인한 교수 1인당 학생 수의 과다 및 교육과정 운영의 부실, 외곽시설 부족, 실험·실습 설비의 부족 및 노후, 도서관 시설·설비의 미비 등 제반 여건의 미흡으로 인해 대학교육의 질 향상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요인들은 모두 재정문제로 귀착된다. 즉, 대학의 여건이 열악한 원인으로서는 여러 가지를 들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대학교육재정 구조의 취약에 있다고 하겠다. 특히 사립대학의 경우 교육비가 주로 학생·학부모가 부담하는 납입금에 의해서 확보되고 있어 교육 재원은 아주 빈약한 상황에 있으며, 교육비의 총량 규모가 영세할 뿐만 아니라 학생 1인당 교육비도 아주 저조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는 교육 투자의 확대와 재정의 효율화 없이는 대학교육의 질은 향상될 수 없음을 시사한다.

'80년대 중반까지만 하여도 정부는 설립자 부담의 원

칙과 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적용하여 대학교육에 대한 재정지원을 소극적으로 추진해 온 반면 대학교육에 대한 광범위한 통제는 계속해 왔다. 그러나 '80년대 후반부터 정부에서는 대학설립, 정원책정, 학사운영, 납입금 책정 등 여러 측면에서 대학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정책을 시행해 오고 있다. '90년대 중반부터는 대학의 수월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학의 다양화와 특성화를 지원하는 각종 정책을 시행하기 시작하였다(송기창, 2000). 실제로 '96년도 이후 교육부의 대학교육 관련 주요 사업예산이 전년도 대비 40~60%의 급격한 증가율을 보이는 등 그 규모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최근 들어 정부는 대학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 및 경쟁력 강화, 대학개혁 추진의 가속화를 위하여 대학재정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정부의 대학재정 지원사업은 대학재정을 확충하고, 사립대학의 재정난 해결에 기여하며, 5·31교육개혁에 따른 대학개혁의 실현에 크게 기여하였다. 정부의 대학재정 정책은 각 대학의 재정 구조는 물론 운영 형태, 그리고 생산성까지 영향을 줌으로써 대학교육의 질적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송광용 외, 1997).

그러나 학과평가인정제, 대학종합평가인정제 그리고 대학교육개혁평가 등 일련의 대학평가를 통하여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한 대학 간 차등적 재정지원 방식을 운영함으로써 정부의 재정지원이 우수한 일부 소수 대학에 편중되고 있으며, 대학평가 영역에 따라 중복으로 지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하여 대학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대학평가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한 대학간의 경쟁이 과열되어 대학교육의 정상적 발전을 위해 필요한 대학간 정보의 교류와 협력 활동이 위축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5·31 교육개혁안 발표 이후 지방대학 특성화 지원, 교육개혁추진 우수대학 지원, 국제전문인력 양성 지원 등과 같은 정부의 대학재정 지원사업들이 평가와 연계하여 시행되면서 대학재정 지원에 대한 관심과 불만이 높아져 왔는데, 총 사업비가 2,000억 원인 '두뇌한국 21 사업(Brain Korea 21 Project)'이 '99년에 시행됨으로써 재정지원 방식과 기준 및 규모를 둘러싼 대학들의 불만과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는 실정이다(송기창, 2000).

2. 정부의 대학재정 지원사업 현황

정부예산 편성 과정을 통해 국립대학 운영을 위해서 지원되는 경상비를 제외한 대학재정에 대한 국고지원사업은 크게 일반 지원사업과 특수목적 지원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일반 지원사업이란 전체 대학이 재정지원 신청서를 제출하고, 교육부가 각 대학의 학생 수, 자구노력 정도, 사업목적 등을 평가하여 신청대학에 비교적 균등하게 재정을 배분하여, 대학의 교육·연구여건 개선 등을 도모하는 사업으로서 대학기반 조성사업, 국립대 실험·실습기자재 확충사업, 공·사립대 시설·설비 확충사업이 이 범주에 속한다.

특수목적 지원사업이란 국가 정책에 따라 특정 분야를 중점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대학에서 작성한 특정 분야의 사업계획서를 평가함으로써 우수대학을 선정하여 대학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대학원 중점 지원

사업, 국제전문인력 양성 사업, 이공계 대학연구소 기자재 첨단화 사업, 교육개혁 우수대학 지원사업,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 산업대 특성화 사업, 대학원 연구중심 대학 육성사업, 국립대 구조조정 사업이 이 범주에 속한다. 이러한 정부의 대학재정 지원사업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원칙과 기본 방향을 가지고 있다(김두식, 1996).

첫째, 대학의 교육·연구여건 및 교육개혁 추진 실적을 평가해서 재정지원과 연계시킴으로써 대학의 자구 노력 을 유도한다.

둘째,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지원을 통하여 대학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대학 간 선의의 경쟁 체제를 마련 한다.

셋째, 대학의 연구력을 향상시키고, 교육여건을 개선 하여 다양화·특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재정지원을 확대 한다.

넷째, 예산집행 결과에 대한 사후 평가를 강화하여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1) 정부의 대학재정 지원사업 전체 현황

다음의 <표 1>은 대학재정 지원사업 전체의 현황을 나타낸 것인데, 2000년도의 경우 일반 지원사업 중에서 투자 규모가 1,000억 원을 넘는 사업을 보면, 대학 시설 지원사업에 2,112억 원, 학술연구 조성사업에 1,200억 원, 교육차관 지원사업에 1,170억 원을 투입하고 있다. 일반 지원사업 중 평가를 통하지 않고 지원하는 사업은 대부분 교수와 학생에 대한 지원이며, 대학이나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사업은 규모가 작은 실정이다. 한편, 일반 지원사업 중에서 평가와 연계된 사업은 대학 특성화 기반 조성(자구노력) 지원사업, 공·사립대 시설·설비 확충 지원사업, 국립대 실험·실습기자재 확충 지원사업이다.

특수목적 지원사업은 '99년에 종료된 대학원 중점 지원사업을 포함해서 8개 사업이 시행되고 있거나 시행 준비 중에 있다. 이 중에서 규모가 가장 큰 사업은 대학원

연구중심 대학 육성사업으로서 2000년도의 경우 2,000억 원이 지원되고 있다. 나머지 사업은 300억 원 이하 규모의 지원사업이다. 이공계 대학 기자재 첨단화 사업, 교

육개혁 우수대학 지원사업을 제외하고는 특수목적 지원사업은 대개 5년 단위(BK 21 사업은 7년 단위)로 시행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송기창, 2000). 한편, 특수

(표 1) 정부의 대학재정 지원사업 현황

(단위: 억 원)

구 분	사 업 명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비 고
일 반 지 원 사 업	교육치관 지원사업	800	850	1,006	1,037	1,302	1,651	1,696	1,956	2,010	1,170	
	학술연구 조성사업	203	203	270	400	600	900	1,200	1,000	1,008	1,200	
	박사후 연수과정 지원	-	-	-	-	-	80	80	58	87	80	
	외국 석학 공동연구 지원	-	-	-	-	-	25	25	-	-	-	
	전국단위연구소 지원	-	19	19	19	19	19	29	25	-	-	
	농어촌 대학생 학자금 융자	-	-	-	17	193	195	200	152	237	306	
	박사과정생 지역연구 지원	-	-	-	-	2	2	4	-	-	-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지원	5	5	5	5	5	5	5	5	4	4	
	신진 연구인력 장학금 지원	-	-	9	9	9	9	15	14	10	10	
	대학생 학자금 이차보전	125	118	117	91	78	78	75	79	128	451	
	사립대 시설확충 융자이자	5	2	1	1	2	1	1	1	0.2	-	
	산업대학 시설지원	-	94	100	122	177	251	313	283	259	272	
	교육대학 시설지원	-	67	47	72	91	202	256	233	260	267	
	대학 시설지원	-	782	827	974	1,422	2,055	2,381	1,965	1,851	2,112	
	국립대학 실험실습기자재	-	97	164	167	451	750	965	951	920	850	평가
	공·사립대학 시설·설비 확충	160	240	400	400	700	1,050	1,250	1,100	850	800	평가
	교대·교원대 기성회 보조	5	6	4	4	4	4	4	4	-	-	
	국·공·사립대 자구노력 지원	-	-	-	500	450	600	540	450	450	450	평가
	대학생 학 예술활동 지원	6	5	5	3	2	2	4	5	3	3	
	시도장학금 지원	-	90	120	120	124	138	141	138	62	50	
	공주대 산업과학대 이전	-	-	-	-	32	20	36	21	95	140	
	금오공과대 이전	-	-	-	-	22	30	50	52	71	117	
	대전산업대 이전	-	-	-	118	133	154	183	173	116	127	
	밀양산업대 이전	-	-	-	-	-	69	12	23	40	62	
	서울대 농 수의대 이전	-	-	-	-	-	-	23	20	120	42	
	군산대 해양대 이전	-	-	-	-	-	-	15	16	64	74	
	대학전산망 구축	-	-	-	-	-	10	77	20	12	12	
특 수 목 적 지 원 사 업	대학원 중점육성 지원사업	-	-	-	-	200	200	200	170	170	-	평가
	국제전문 인력양성	-	-	-	-	-	200	200	160	100	100	평가
	이공계대학 기자재 첨단화	-	-	-	-	-	150	170	170	119	120	평가
	교육과학기술 우수대학	-	-	-	-	-	300	270	200	200	200	평가
	지방대학 특성화	-	-	-	-	-	-	180	150	150	150	평가
	산업대학 특성화	-	-	-	-	-	-	-	20	25	30	평가
	대학원 연구중심대학 육성	-	-	-	-	-	-	-	-	2,000	2,000	평가
	국립대 구조조정	-	-	-	-	-	-	-	-	-	300	평가

※ 자료: 송기창(2000. 4. 29), "대학에 대한 국고지원 제도의 문제와 개선 방향", 대학재정 운영의 효율화와 안정적 재원 확보 방안 모색,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제27차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 p. 5.

목적 지원사업은 모두 평가를 거쳐서 재정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2) 평가에 의한 대학재정 지원사업 현황

교육부가 평가에 의해 대학에 재정지원을 하는 사업은 '90년대 초반부터 시작하여, 대학의 재정난 해소에 도움을 주고 있다. 평가를 거쳐 재정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3개의 일반 지원사업과 8개의 특수목적 지원사업은 대학의 교육과 연구여건 개선, 대학의 특성화와 다양화 유도, 대학개혁 촉진 등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우수 대학 중점 지원의 성격이 강해 소수의 우수대학에 재정 지원이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표 2>는 평가에 의한 대학재정 지원사업의 현황을 나타낸 것인데,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이화국 외, 1999: 10~

16: 송기창, 2000: 4~10).

① 대학 특성화 기반조성(자구노력) 지원사업

이 사업은 정부 정책과 부합되는 대학의 자율적인 구조조정 등 정책 시행 노력에 따른 차등 재정지원으로 대학간 선의의 경쟁 및 특성화, 경영 효율화를 자율적으로 유도하여 교육·연구역량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대학 교육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함과 아울러 사학의 재정난 완화를 목적으로 '94년에 도입되었다.

일반 재정지원의 성격으로 지원을 확보하여 이를 일률적으로 배분하지 않고, 대학의 자구노력과 연계시킴으로써 대학의 기본 여건 개선과 구조조정의 노력 효과를 동시에 얻고자 도입된 이 사업의 지원금은 '98년까지는 보조금 형태로 지원하였으나, '99년부터는 대학의 예산집

<표 2> 평가에 의한 대학재정 지원사업 현황

(단위: 백만 원)

구 분	사 업 명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사업 연도
일 반 자 원 사 업	대학 특성화 기반 조성(자구노력) 지원사업	45,000 (158개교)	60,000 (163개교)	54,000 (178개교)	45,000 (177개교)	45,000 (179개교)	45,000 (189개교)	94 ~
	공·사립대 시설·설비 확충 지원사업	70,000 (112개교)	105,000 (117개교)	125,000 (134개교)	115,000 (133개교)	85,000 (136개교)	80,000 (136개교)	90 ~
	국립대 실험·실습기자재 확충 지원사업	45,050 (48개교)	75,006 (48개교)	96,504 (48개교)	95,059 (48개교)	75,616 (48개교)	85,000 (48개교)	81 ~
특 수 목 적 자 원 사 업	대학원 종점 지원사업	20,000 (5개교)	20,000 (5개교)	20,000 (5개교)	17,000 (5개교)	17,000 (5개교)	-	95 ~ 99
	국제전문인력 양성 사업	-	20,000 (9개교)	20,000 (9개교)	16,000 (9개교)	10,000 (9개교)	10,000 (9개교)	96 ~ 00
	이공계 대학연구소 기자재 첨단화 사업	-	15,000 (59개소)	17,000 (71개소)	17,000 (72개소)	11,900 (57개소)	12,000 (57개소)	96 ~
	교육개혁 우수대학 지원사업	-	30,000 (40개교)	27,000 (40개교)	20,000 (30개교)	20,000 (30개교)	20,000 (30개교)	96 ~
	지방대 특성화 지원사업	-	-	18,000 (28개교)	15,000 (28개교)	15,000 (28개교)	15,000 (28개교)	97 ~ 01
	산업대 특성화 지원사업	-	-	-	2,000 (5개교)	2,500 (5개교)	3,000 (5개교)	98 ~ 02
	대학원 연구중심대학 육성	-	-	-	-	200,000	200,000	99 ~ 05
	국립대 구조조정	-	-	-	-	-	300,000	00 ~

※ 자료: 송기창(2000. 4. 29), "대학에 대한 국고지원 제도의 문제와 개선 방향", 대학재정 운영의 효율화와 안정적 지원 확보 방안 모색,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제27차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 p. 6.

행 신축성을 확대하기 위해 출연금 형태로 지원하고 있다. 2000년도의 경우 189개 대학에 총 450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② 공·사립대 시설·설비 확충 지원사업

이 사업은 공·사립대학의 시설·설비(실험·실습기자재) 확충 및 정보화 시대에 부합되는 도서관 전산화 관련사업비 등에 지원함으로써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사학의 재정난을 완화하기 위해 '90년에 도입되었다. 교육부의 일반회계를 재원으로 전체 공·사립대학에 보조금 형태로 지원되는 이 사업의 대학별 지원액은 평가 결과에 따라 수천만 원에서 30억 원까지 차등 지원되었으며, 국고 지원액 20%이상의 대응 투자를 의무화하고 있다. 2000년도의 경우 136개 대학에 총 800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③ 국립대 실험·실습기자재 확충 지원사업

이 사업은 국립대의 실험·실습기자재 및 신설 국립의·치대의 기자재 확충, 대학 공동실험실습관 지원으로 교육·연구여건을 개선하고, 대학에 보유중인 실험·실습기자재의 유지·보수, 부품구입비·수리정비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교육 활동의 원활화를 도모할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특히, 대학 실험·실습설비기준('83년 제정, '97년 폐지), 대학설립·운영규정('96년) 및 고등교육법시행령('98년) 등에서 규정된 국립대의 실험·실습기자재 여건을 일정 수준 유지하기 위하여 지원되는 이 사업비는 교육부의 일반회계를 재원으로 보조금 형태로 지원된다.

이 사업은 국립대 48개교(일반대 24, 산업대 8, 교육대 11, 전문대 5, 방송대는 사업의 성격상 제외)가 지원대상이며, 국립대 실험·실습기자재 확충, 대학 공동실험실습관 지원, 신설 국립 의·치대 기자재 확충, 기자재 유지·정비의 5개 분야로 구분하여 지원되었다. 2000년도의 경우 48개 대학에 총 850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④ 대학원 중점 육성 지원사업

이 사업은 대학의 기능 분화를 통한 대학 간에 역할 분담 유도 및 대학원 과정의 교육·연구기능 활성화로 첨단 과학기술분야의 연구수준 제고와 고급 연구개발 인력을 양성하여 국가경쟁력을 제고할 목적으로 '95년부터 '99년까지 5년간 시행된 사업이다. 대학의 학부 지원 중심이었던 기존의 재정지원과는 달리, 대학원만을 대상으로 한 최초의 지원정책으로서, 대학원의 첨단 과학기술분야를 중점 육성하기 위한 이공계 대학원 육성 정책의 차원에서 지원하는 이 사업은 교육부의 일반회계를 재원으로 하여 출연금 형태로 지원된다. '99년도의 경우 5개 대학에 총 170억 원을 지원하였다.

⑤ 국제전문인력 양성 특성화 지원사업

이 사업은 '95년 교육개혁위원회의 '국제관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및 세계화추진위원회의 '외국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과 지역전문가 육성 방안'에 의거하여 세계화 시대에 대응할 국제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특성화 대학(국제대학원)을 육성할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교육부의 일반회계를 재원으로 출연금 형태로 지원되는 이 사업의 지원대상은 대학 단위로 평가를 통하여 선정된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이화여대, 한국외대, 경희대, 서강대, 중앙대, 한양대의 9개교이다. 이 사업을 위한 각 대학의 대응자금이 '98년까지 644억 원이 확보되어 있으며, 이 사업이 2000년에 종료됨에 따라 프로그램 운영의 자립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대응자금을 계속 의무화할 예정이다. 2000년도의 경우 9개 대학에 총 100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⑥ 이공계 대학연구소 기자재 첨단화 지원사업

이 사업은 대학의 연구여건 선진화를 통한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공·사립대학의 이공계 연구소 중에서 우수연구소를 선정하여 첨단과학 연구기자재 구입 및 활용관리 예산을 지원할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사

입비의 재원은 교육부의 일반회계로 '98년까지는 보조금 형태로 지원하였으나, '99년부터는 대학의 예산집행 신축성을 확대하기 위해 출연금 형태로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의 지원자격은 국·공·사립 4년제 대학 중 일반 대 및 산업대의 연구소이며, 평가를 통하여 지원대상 연구소를 선정하게 된다. 이 사업은 '96년부터 시작되었는데 지원대상 연구소는 전문연구소(학과 단위), 종합연구소(단과대 단위), 특화연구소(특화 단위), 공동연구소(전국 단위)로 구분하며, 지원예산은 연구용으로서 공동 활용이 가능한 3천만 원 이상의 고가 기자재 확충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15% 이내에서 활용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00년도의 경우 57개소에 총 120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⑦ 교육개혁 우수대학 지원사업

이 사업은 교육개혁추진 우수대학을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대학별 다양화·특성화를 유도하고 평가 결과에 따른 재정의 차등지원을 통해 경쟁적 분위기 조성과 개혁 우수사례의 전국 확산을 통해 대학개혁 추진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이 사업의 재원은 교육부의 일반회계로 출연금 형태로 지원된다. 지원자격은 국·공·사립 4년제 대학(산업대, 교육대, 방송대 포함) 및 대학원 대학으로서, 매년 새로이 신청을 받아 평가를 통하여 선정한다. 이 사업은 '96년부터 시작된 계속사업으로 매년 30 또는 40개교를 선정하여 평가점수에 따라 대학당 2~9억 원씩 차등지원하고 있으며, 국고지원액에 상당하는 대응투자를 권장하고 있다. 2000년도의 경우 30개 대학에 총 200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⑧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

이 사업은 세계화·지방화 시대에 부응하여 국제전문 인력 및 지역산업 현장에 필요한 우수 인력을 양성하고 지방대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 소재 대학만을 대상으로 한 특성화 사업이다. 이 사업은 '96년도부터 시

작된 국제전문인력 양성 특성화 대학 9개교가 모두 서울에 소재한 대학인 점과 관련하여 서울과 지방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이 사업의 지원자격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 소재한 국·공·사립 4년제 일반대와 산업대로서, '97년도 사업 시작시 국제전문실무 인력 양성분야(6개교), 공학분야(8개교), 기초과학분야(5개교), 자유응모분야 인문부문(4개교), 자유응모분야 기타부문(5개교) 등 5개 분야에서 28개교가 선정되었으며, 이들 대학에 '97년부터 2001년까지 5년간 계속하여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 사업비의 재원은 교육부의 일반회계로 출연금 형태로 지원되며, 평가점수에 따라 대학당 2~9억 원씩 차등 지원하고 있으며, 국고지원액에 상당하는 대응투자를 의무화하고 있다. 2000년도의 경우 28개 대학에 총 150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⑨ 산업대 특성화 지원사업

이 사업은 산업대의 설립목적에 부합하게 운영하고 있는 우수 산업대를 선정하여 중점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전문기술인력 양성 등 직업교육기관으로서의 산업대의 정체성 확립 및 특성화를 유도할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산업대가 설립목적에 나타난 특수성을 추구하기보다는 일반 대학화 하려는 경향이 많아, 이를 지양하고 전문기술인력 양성기관으로서의 정체성 확립이 요구되고 있다. 이 사업비의 재원은 교육부의 일반회계로 '98년에는 보조금 형태로 지원하였으나, '99년부터는 대학의 예산집행 신축성을 확대하기 위해 출연금 형태로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은 '98년에 시작하여 2002년까지 5년간 계속 추진 예정인 이 사업의 지원자격은 산업대 19개교(국립 8, 사립 11)이며, 매년 새롭게 평가를 하여 그 결과 5개교만 선정하여 재정지원을 하는데, 국고지원액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대응투자를 의무화하고 있다. 2000년도의 경우 5개 대학에 총 30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⑩ 대학원 연구중심 대학 육성 사업

이 사업은 '두뇌한국 21 사업(Brain Korea 21 Project)'으로 알려져 있는데, 대학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학술연구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99년도부터 추진되었다. 이 사업은 세계적 수준의 대학원 집중 육성과 지역대학 특성화를 통한 고등인력양성체계를 구축하며, 학사과정 정원 감축 및 대학원 문호개방 등 대학교육개혁과의 연계 추진을 통하여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세계적 수준의 대학원 및 지역대학 육성을 위해서 '99년부터 2005년까지 매년 2,000억 원씩 총 1조 4천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2000년도의 경우 총 2,000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⑪ 국립대 구조조정 사업

국립대 구조조정 사업은 2000년에 신규로 시작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 300억 원이 확보되어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다.

3. 정부의 대학재정 지원사업의 개선 방향

정부의 대학재정 지원사업은 대학의 재정을 확충하고 대학개혁의 실현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대학간 경쟁을 통한 재정배분방식을 취함으로써 정부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러나 현행의 제도로는 대학의 재정난을 획기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우며, 재정지원의 근거가 되는 대학 평가가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재정지원 절차와 시기상에 문제점이 있으며, 대학별 차등지원으로 인해 대학 간 재정배분의 불평등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대학 간 협동과 대학의 자율적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여 정부의 대학재정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송기창, 2000; 송광용, 1997).

첫째, 대학재정 지원사업의 종량 규모가 증대되어야 한다. 그 동안 국고지원사업이 꾸준히 증가하였지만, 여전히 설립자 부담의 원칙과 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적용하여 대학교육비의 부담을 대학당국과 학생 및 학부모에 부과해 왔다. 그 결과 전체 교육예산에서 고등교육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9.1%에 불과한 실정이다. 사립대학의 경우 학생납입금이 총 운영수입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국고지원금은 3.5%에 불과한 실정이다. 교육을 제대로 하는 나라의 경우 사립대학이라 할지라도 대학재정의 30~40%를 정부가 보조해 주며, 기타 개인과 기업을 포함한 단체들의 기여도 무려 20% 내외에 이른다. 따라서 대학재정 지원사업의 종량 규모가 적어도 사립대학 운영수입의 10%까지 획기적으로 증대되어야 한다.

둘째,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은 각 대학의 재정운용평가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대학재정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 대학의 재정운용 전반에 관한 평가모형을 개발하여 시행함으로써 효율적인 대학재정 운용과 합리적인 국고지원을 확립하는 근거자료로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각 대학에서는 자체적으로 경영평가를 제도화하고, 재정운영의 효율화를 위한 경영 혁신을 이룩해 나가야 한다. 또한 각 대학에서는 지원받은 국고보조금이 제대로 사용되었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사후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한편, 대학재정 지원을 위한 대학재정운용평가를 양적인 기준에 의해서만 실시한다면 현재 재정 운용이 양호한 대학에만 재정지원이 집중될 것이기 때문에 우수대학 뿐만 아니라 최근 몇 년 간 발전의 지와 개선노력을 보여 온 교육여건이 열악한 대학에도 재정지원이 주어져야 대학간 균형발전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대학별 차등지원 방식이 개선되어야 한다. 경쟁을 통한 차등적 재정지원에 앞서 대학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 따라서 경쟁을 통한 차등지원 방식과 병행하여 대학 간 격차 해소를 위한 재정

지원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교육의 세계에서는 경쟁의 논리와 시장의 논리보다는 교육의 논리와 협동의 논리가 적용되어야 한다. 지나친 경쟁을 통한 대학의 서열화와 대학간·학문간 협동체제의 저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수준을 전체적으로 정상화시키는 바탕 위에서 경쟁논리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대학재정 지원사업은 우선적으로 각 대학들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 규모를 획기적으로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선진국들의 경우 샤립대학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규모가 우리 나라보다 월등히 높다는 것은 영세한 재정지원 규모를 나타내고 있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 크다. 발전노력과 의지는 강하지만 열악한 환경에 있는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강화한다는 수직적 평등관에 근거한 재정지원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 경쟁에 의한 차등지원 방식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투명하고 공개적인 결정 과정을 통한 재정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사업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지 못하였다는 대학사회의 인식을 얻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재정지원 결정 과정이 명료하게 공개되지 못하였다는 데 있다. 국민의 세금을 그 재원으로 하여 대학에 직접적인 혜택을 주는 재정지원에 있어서는 그 결정 과정이 명료하게 공개되어야 정부에 대한 신뢰성이 보장될 수 있으며 재정지원의 목적도 달성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재정지원을 위한 대학평가의 기준과 과정을 공개하여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재정지원대상 대학의 선정 및 재정배분 기준의 책정 과정을 투명하게 하여 공개적인 재정지원 방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김두식(1996), “정부의 대학재정지원, 기본 방향과 내용”, 『대학교육』, 11/12월호, pp.23~29.
- 김재웅(1997), “대학개혁안의 근본 취지와 추진상의 문제점”, 『대학교육』, 7/8월호, pp.89~93.
- 나민주(1998), “대학재정 지원정책 분석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송광용 외(1998), “대학재정 국고지원 현황에 관한 연구”,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송기창(2000.4.29), “대학에 대한 국고지원제도의 문제와 개선 방향”, 대학재정 운영의 효율화와 인정적 재원확보 방안 모색,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제27차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 pp.1~19.
- 이화국 외(1999.12), “고등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대학평가지표의 체계화 및 개발에 관한 연구”, 교육부 정책연구과제.
- 한국대학교육협의회(1998), 『대학교육발전지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강경석

서울대 교육학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Wisconsin대에서 교육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미국 Wisconsin Center for Education Research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였으며, 현재 인하대 사범대학 교육학과 부교수로 재직중이다. 주요 관심 분야는 교육재정학, 교육경제학, 교육행정학이며 교육재정학 및 교육행정학에 관한 다수의 논문과 저서가 있다.